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편견이 양돈농가 생존권 위협해

- 양돈협,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사신축 해결방법 모색

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실상 양돈장 허가를 좌우하는 환경평가기관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양돈장 건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의 양돈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에 근거한 양돈장 불허 부당 판결

최근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는 최근 양돈장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 양돈농가가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산지전용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에 반발, 2심을 제기하는 한편 양돈장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 청주에서 종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우리종돈장 김사장은 지난 2004년 충북 음성군에 비육돈 농장을 만들려고 총 29,800㎡ 부지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냈으며, 이와 함께 사전환경영향검토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양돈장이 광범위하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고갈시키며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김 사장은 대전고등법원에 최근 양돈장 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는 산지전용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으로 불복하는 음성군

음성군은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양돈장이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사설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음성군을 관할하는 원주 환경청에서도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양돈장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양돈장 예정부지가 마을 꼭대기 부분에 위치, 냄새와 함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농장주의 이익 보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구나 사전환경성평가에서도 ‘부동의’ 평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과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을 관할하는 원주환경청 관계자도 “환경평가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양돈장 부지가 산허리 부분에 위치, 생태축 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라며 “또한 지하수 및 하천오염 가능성에 대한 지적 역시 당연히 예측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마을과 5백여미터나 떨어져 피해가능성 희박**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우리육종측은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양돈장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특히 지하수 1백톤 미만 사용은 신고사항인데다 부지 위치가 마을과 5백여미터 떨어져 있고 그나마 언덕을 넘어가 두개의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장허가를 좌우할 중요한 평가를 막연한 추측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만약 양돈장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한다면 그곳에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기존 양돈인들은 어떻게 됐겠느냐”며 원주환경청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및 절개지 발생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돈장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의 판결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평가와 관련, 오염가능성이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막연한 오염가능성만으로 부적합 평가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양돈장 신축은 물론 기존 양돈장도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 농지법 개정 등으로 돌파구 마련할 것**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지내 축사 신축 가능에서 그 해법을 찾고,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며, 냄새 및 지하수 고갈 등 객관적인 환경영양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돈협회는 양돈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축 분뇨의 경우 오염원이 아닌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원이라는 점 등도 지자체 등에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돈**